

신임 농림수산부장관전 상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가경제를 지켜주는 소득작목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숨아넌 푸성귀가 오뉴월 피약벌 아래 시들시들하듯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는 농촌,

똑똑하고 쓸만한 젊은이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50대가 젊은이 소리 들을 정도로 급격히 노령화하여 활력을 잃어버린 농민,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고 계시는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돼지가 좋아서 16년째 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양돈농민입니다. 제 아들놈도 축산대학에 보내서 애비처럼 돼지와 함께 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촌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양돈정책, 그 중에서도 유통정책에 대하여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을 뒤돌아보면 정책 수립과 집행기준을 「물

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case by case)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물가안정이 저희들의 「경영안정」을 해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도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운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지, 돼지와 함께 살다보니 돼지 머리처럼 돌머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격인지, 돼지고기가격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구별이 안됩니다. 돼지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고, 돼지가격이 하락하면 수매·비축하여 돼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한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태 우

(본회 울산시지부 부지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라는 것이 돼지가격이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 즉, 「소비자지불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돼지가격이 상승해도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에 유통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유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돼지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 여러번 경험한 사실입니다 - 수입 돼지고기가 도매시장에 상장이 되면 즉시 산지 돼지가격이 폭락합니다. 정육점입장에서 보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소비자 지불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봅니다. 하다 못해 위생검열이다, 세무사찰이다 엄포를 놓아도 정육점단체인 축산기업조합은 눈도 깜짝 안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정부가 어찌서 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가격자율화를 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서너가지 변수를 대입시켜 연립 2차방정식까지 동원해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물가안정도 못시키고 정부돈으로 돼지고기 수입해서 산지

돼지가격을 폭락시킨 양돈농민을 희생시키고, 정육점의 이익을 배가(倍加)시켜 주는 결과가 됩니다.

분통이 터지다 못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육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라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양돈인의 입에서도 “아!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라는 탄식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부돈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중에는 제가 낸 돈도 있습니다 - 특정업자에게 이익을 안겨 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는지, 감히 장관님께 여쭙봅니다.

장관님!

정육점 경영으로 망했다는 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정육점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소비자 복지를 얼마나 하락시키는지,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3개 도매시장 1일 돼지도축두수 ÷ 서울지역 정육점수 = 1개 정육점 1일 평균 판매두수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 판매두수가 불과 1.6두라면 장관님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하루 1.6두 판매로, 서울지역의

살인적인 점포임대로 내고, 생활하고, 자녀교육시키고, 저축까지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무엇인지 자명해집니다.

이렇게 정육점 소비자가격이 높다 보니 수입쇠고기가 돼지고기 소비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오고 있으며, 따라서 귀중한 외화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돼지가격이 하락하여 수매, 비축할 경우 - 이것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 정부에서 수백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돼지가격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또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냉동창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청과물과는 달라서, 비축기간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도 없고 비축한 고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 한, 누가 먹어도 먹어야 합니다.

수매, 비축정책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근본대책은 못됩니다. 차라리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가 더 나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입정책이나 수매 비축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면 수입을 통한 돼지고기 가격안정정책이나 수매 비축을 통한 돼지가격 안정정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

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상인이 주도하는 유통은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인은 물류를 조절하고 유통기능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기본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거나 상인이 주도하는 유통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은 생산자단체가 주도해야 합니다.

양돈선진국인 대만이나 덴마크도 생산자단체가 유통을 주도함으로써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생산자단체가 계열조직을 만들어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거뜬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 경영을 피할 수 없는 근본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 상인이 주도하는 유통에 있다면 정부의 지원도, 정부의 정책도 생산자 중심의 유통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관님!

이 유통개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인으로부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아들이고 허탈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어 쓰디 쓴 소주 한잔으로 울분을 삭일 수밖에 없는 서글프고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남쪽 제주지부부터 최북단 철원지부까지 전국에 87개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부마다 직관장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소비홍보활동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여론과 압력에 의해서 정육점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지 않고는 견뎌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부 직관장의 영향으로 정육점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입장에서 보면 물가안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값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쇠고기에 빼앗긴 소비시장을 되찾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럼으로써 소비촉진이 되어서 좋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가격 인하가 수입개방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입개방대책이 바로 소비자가격인하입니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수매비축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장관님!

저희들을 돼지키우는 사람들이라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는 몰라도, 양돈협회 회원들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돈콜레라로 폐죽음 당한 돼지를 내 손으로 구덩이에 끌어 묻으면서도 눈물 한방울 안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불굴의 투지로, 끈질긴 인내로 능히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에 「구제금융」요청하는 기업인들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제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뚝뚝 뚫쳐서 「유통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싫건 좋건간에 저희들 생산자가 살 길은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두팔 걷어 붙이고 열심히 해서 절대로 장관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벼랑 끝으로 물리고 있는 600만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관장 설립을 갈망하는 전국 양돈인들의 염원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줄필이라 너무 부끄러워 이만 줄입니다. 